

### 지방선거 4개월 앞으로 공천물이 관건

# 기초 정당공천 문제에 '발목'... 한발짝도 못나가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신당 창당작업을 서두르면서 6·4 지방선거는 기존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신당이 가세하는 3각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호남에서는 민주당 공천장이 당선증이라는 과거 선거와 달리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치열한 경쟁을 하게 돼 각 당이 내세운 후보의 면면이 승패에 결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각 당은 공천물을 어떻게 만들지 골몰하고 있으나 당 사정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가장 빠르게 공천물 논

## 민주당, '공천장=당선증' 옛말 신중... 전략공천 변수 안신당 '공개 오디션' 검토 ... 새누리 '경선' 추진

의에 들어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이후 과정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 문제가 마무리될 때 기초선거 공천물 문제를 포함, 전체적인 공천물 논의를 마감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현재 민주당 당무위원회의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광역단체장 후보자

경선물은 '해당선거구의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50%, 여론조사)+전국대의원(10%)+권리당원(30%)+일반당원(10%)' 방식의 경선안이다. 또 지역구 광역의원 후보자 경선 방식은 '해당 선거구의 지역대의원(20%)+권리당원(50%)+일반당원(30%)'이며,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자의 경우는 '해당 시도당 전국대의원(50%)+시도당 당원들 사이에서 추

출한 당원공천선거인단(50%)의 방식'으로 뾰족하고 있다.

기초단체장·의원의 경우는 민주당이 공천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어 아직까지 경선물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당공천을 할 경우에는 광역단체 경선물을 준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모든 선거구에서 경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김 대표는 그동안 개혁공천을 내세워 전략공천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보였다. 현재 당헌·규

상 전략공천 비율은 30%여서 상당수 선거구에서 전략공천에 의한 후보자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신당=아직 창당도 못한 상황이라서 공천물 논의를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다. 김호석 새정치 공동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창당이 되면 공천심사위가 구성될 것이고 거기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전문가와 국민, 당원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권위를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보였다. 현재 당헌·규

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기득권 정치와 차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당 논란을 피하면서도 객관성을 갖고 후보 면면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창당이 지방선거가 임박해 이뤄지면서 시간상으로 전면적 경선이 어렵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김성식 새정치 공동위원장은 최근 MBC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창당과 선거가 겹치다 보니 전면적인 '상황식 공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나아가 이 같은 이유로 상당 부분

에서는 전략공천이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당헌·규에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선출에 대한 일괄적인 공천기준은 없다.

그동안 각 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후보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단체장은 물론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모두를 경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당만이라도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 혁신과 일각에서 주장 반대의견이 더 많은 상황

민주당 내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제도화가 끝내 무산될 경우 민주당만이라도 6·4 지방선거에서 공천 폐지를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놓고 궤를 같이 해온 안 의원 측에 비해 실천적 측면에서 한 발짝 앞서 나가자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성향 후보 난립에 따른 '필

패' 가능성 우려 등을 내세운 반대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이다.

강기정 의원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만이라도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아야 혁신 노력의 진정성도 인정받을 수 있다"며 당 차원의 '무공천 선언'을 제안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이진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무공천을 주장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전국 단위의 실행이 어렵다면 텃밭인 호남에서만이라도 무공천을 실천하자는 구상이다. 의총에선 양승조 최고위원, 홍의락 의원 등도 '무공천 주장'을 거는 것

로 알려졌다.

강 의원을 비롯해 최재성·오영식·조정식 의원 등의 주도로 내주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정치교체·정당 재구성을 위한 혁신모임'(가칭)은 조만간 당내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위원장 이종걸)는 지역별 여건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여론수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 득실을 따져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기초연금 여야정 첫 회의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장병만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국회 사랑방에서 열린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밝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안신당 '인물 영입' 공방

### 박지원 의원 "광역의원 20여명 빼가려고 서명... 참신성에 의문" 윤여준 의장 "금시초문... 동요 있다면 새정치 영향력 입증한 것"

지방선거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6일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신당 간 인물 영입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신당이 특정 지역에서 민주당 소속 광역의원 20여명을 빼가려는 서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전북에서는 강봉근(전) 의원을 데려간다. 광주·전남에서도 모 의원들 주도로(지방)의원들을 빼가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를

들고 있다"면서 "사람을 빼가는 것엔 성공할 수 있지만 과연 신당으로서 참신성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이탈 움직임에 대해 "기초단체장 출마를 생각해 민주당에서는 공천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방법으로 옮겨간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신당이 성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안 의원 측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의 윤

여준 의장은 박 전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며 "어느 지역에선 그런 규모로 민주당 의원들의 동요가 있다면 그런 새 정치의 영향력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과오를 저지른 것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남 탓만 하는 고질병도 고쳐야 한다"라며 "새로운 걸 하겠다는 사람이 합당하면 할수록 국민은(민주당을) 더 낫은 세력으로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격돌

### 與 "실익 없는 위선적 개혁" 野 "공약 파기해 국민 우롱"

###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했다.

2월 임시국회의 대정부질문 첫 날인 이날 정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와 주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었다.

특히 여야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는 실익도 없고 '위선적 개혁'일 뿐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당공천 폐지는 2012년 대선 당시 여야 후보의 공약이라는 점을 거둬들여 공약 실천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정당공천을 폐지해도 후보자의 정당 표명이나 지역 국회의원의 '내천'을 규제할 방법이 없고, 검증되지 않은 후보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며 "일각에서 중앙당의 공천권 행사로 지방자치가 무력화되고 지방이 중앙에 예속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현재의 공천제도를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정당

공천 폐지를 약속했던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금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함 그 자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오던 박 대통령은 자당 소속 의원들이 공약을 파문해 버리려고 야간법석인데 '나 몰라라' 침묵하시다니요"라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어이없는 표변과 국민 우롱의 정치회국은 결국 비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올해 5.18을

100일 앞둔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며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고,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유운근 의원은 "지난 87년 헌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지만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로 인해, 우리 모두 대통령 고지를 향한 끝없는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이라며 "이제는 협의 민주주의 형태의 분권형 또는 대통령제를 거미한 내각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황칠나라**  
DENDRO-PANAX

소자본 투자 / 안정적인 고소득 창출

**황칠나라**  
**식당모집**

061 864 5788

황칠 전문 판매점과 더불어 기존식당에서 황칠제품을 활용하여 신메뉴 개발을 통한 고소득 창출

www.황칠나라.kr

**명품황칠요리**  
**황칠(愛)비법**

황칠(愛)비법 진액은 식품첨가물입니다. 파우치 형태로 제작되어 쉽게 식품에 첨가할 수 있으며, 특히 육류나 어류 및 장류의 잡내를 없애주며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과 영양  
사과 영양  
어느것도 놓칠 수 없는 황칠나라만의 고집!!!*

황칠(愛)비법 (주)  
전남 장흥군 장흥읍 배림리 69-3